정책제안서

1. 제안 위원회: 청년위원회
2. 제안 정책명: 청년 영양 진흥 조례(지자체별 시행)
3. 정책 내용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 20대 평균 금융부채율은 2020년 초 약 5.2조원에서 지난해 말 약 7.3조원(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으로 불과 10개월 간 4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평시라고 할지라도 이는 결코 작은 수치임이 아님은 분명하나 팬데믹 상태에 돌입한 이후 해당 수치가 갖는 파급력은 더욱 증폭되었으리라. 생활 유지를 위해 부채를 얻은 이들이 이를 적정하게 상환하기 위해서는 직업과 일자리가 필요한데, 많은 기업의 사정이 악화되며 2030세대는 그 입구를 두드릴 기회마저 박탈당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살인적인 임차비용, 통신비 등 각종 고정 비용들은 덤으로 그들의 삶을 옥죄어 온다. 이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다수의 청년은 이른바 '소멸 비용'이라고 생각되는 식비를 가장 먼저 긴축하며 힘겹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실제 한 취업 포털에서 실시한 설문에서는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약 40%에 육박하는 청년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끼니를 챙기는 청년 중에서도 '편의점', '배달 음식'등 질이 좋지 않은 식품을 자주 접하면서 성인 영양결핍 등에 노출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나. 주요 정책적 질문

- 미래세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청년 세대가 생활고로 인해 사실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나 정작 자신의 존재 자체에 위협을 받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 주요 정책 내용

- 각 지자체별로 청년세대가 쉽게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식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영양 진흥 조례'를 추진(대학내 운영되는 '천원의 아침' 프로그램 등 벤치마킹), 해당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나 기관을 신설하지 않고 지역 내 각 거점 공공기관, 대학, 전통시장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접근성과 경제적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기존 이용객의 불편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각 시행 지자체 내에서 모색, 논의)

라. 기대효과

- 생활고를 겪는 청년에게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제공
- 전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확대 등